

여 “공작·음모 정치공세 사과” 야 “김건희 왕국 선언인가”

김건희 불기소 처분 놓고 거센 공방 조승래 “사법 정의 무너뜨려” 비판 한민수 “특검 반드시 통과시킬 것” 박준태 “만시지탄...모든 의혹 해소”

여야는 지난 2일 검찰이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사건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과 김 여사, 최재영 목사,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 이명수 서울의소리 기자 등 관련자 전원을 불기소 처분한 것에 대해 거센 공방을 주고 받았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공작·음모론에 기반한 정치 공세를 사과하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특검을 반드시 통과시켜 이 땅에 법과 정의가 살아있음을

입증하겠다”고 했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 브리핑을 통해 “오늘은 윤석열 대통령과 검찰이 민주공화국의 사법 정의를 무너뜨리고, 김건희 여사가 대한민국 위에 군림하는 최고 권력자임을 만천하에 드러낸, 오욕의 날로 기록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오전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했고, 오후에는 검찰이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사건을 불기소 처분했다”며 “김건희 여사는 대통령과 검찰, 감사원, 권익위 등 모든 권력 기관과 심지어는 여당까지 결사적으로 보위하는 절대 권력자라는 말인가”라고 꼬집었다.

조 수석대변인은 “윤석열 대통령과 검찰이 저지른 만행은, 민주공화국을 부정하고 김건희 왕국을 선언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말했다.

한민수 대변인도 검찰 처분에 대해, “증거가 명확한 수사를 계속 시간만 끌더니, 결국 대통령실에서 원하는 답으로 결론을 내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 대변인은 “최근 불거진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도 이처럼 문겉 심산인가”라며 “민주당은 김건희 특검법을 반드시 통과시켜 이 땅에 법과 정의가 살아있음을 입증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을 향해 “공작·음모론에 기반한 정치 공세를 사과하라”고 주장했다.

박준태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검찰은 대통령 부부의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두 차례의 수사심의위원회 결과와 수사팀의 조사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며 “만시지탄”이라고 밝혔다.

박 원내대변인은 “이번 검찰 수사 결과 발표로 그동안 제기됐던 모든 의혹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아울러 영부인을 상대로 인권을 유린하며 몰카 공작에 가담한 이들이 깊이 반성하고 성찰하기를 바란다”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진영 논리에 따라 침소봉대를 밥 먹듯이 해 논란을 키운 몇몇 언론들 역시 검찰 수사 결과를 경허히 받아들여야 한다”며 “특히 공작과 의혹 제기

의 최선봉에 서서 이런 흐름을 주도했던 야당의 행태야말로 역사의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그럼에도 민주당은 여전히 음모론과 공작설과 결별하지 못한 채 고담 정치를 반복하고 있다”며 “없는 의혹을 만들어 상대를 공격한다고 해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시간이 갈수록 짙어지는 이 대표의 불법적 행위는 어떤 정치 공세로도 상쇄될 수 없음을 직시해야 한다”며 “하루빨리 특검의 굴레에서 벗어나 민생에 집중해 달라는 국민의 마음을 헤아리길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서울=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

국회, ‘국정감사 종합상황실 현판식’ 개최

국회사무처는 지난 2일 상임위원회별 감사 진행 상황을 종합·보고하는 ‘국정감사 종합상황실’의 현판식을 개최했다.

김민기 국회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 본관에서 열린 현판식에서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국정감사에 필요한 자료나 선례 등을 위원회에 적시에 제공하고 주요 증인 불출석·국정감사 파행 등 특이사항을 신속하게 보고·전파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국정감사는 기후위기 대응 차원에서 종이 활용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치러진다.

이를 위해 각 상임위원회는 자료 배부 방식을 전자화하는 방향으로 위원·간사 간 협의를 진행하기도 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종이 없는 국감’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지난달 30일 각 의원들에게 진전을 발송했다.

한편 올해 국정감사는 오는 7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26일간 실시된다.

17개 상임위원회가 채택한 국정감사계획서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등 14개 상임위원회는 오는 7~25일, 국회 운영위원회는 오는 31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정보위원회는 오는 29~31일 각각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서울=김선욱 기자

민형배 “소외계층 대상 ‘찾아가는 영화관’, 광주신청 0건”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광산을·사진)은 3일 “문화 소외 계층 및 소외 지역을 위한 ‘찾아가는 영화관’ 사업에 전국 17개 지방자치단체 중 광주시만 단 한 건도 신청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민 의원이 한국영상자료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찾아가는 영화관’ 누적 시행 횟수 및 관객 수는 강원도가 157회, 3만8419명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129회, 1만2760명), 전북(75회, 1만1766명)순이었다.



반면, 광주시는 지난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신청 건수가 단 한 건도 없었다. 민 의원은 “다른 지역은 문체부 예산으로 주민들이 문화 혜택을 누리고 있음에도 광주 시민들은 균등한 기회를 제공받지 못하고 있다”며 광주시의 적극 행정을 주문했다.

서울=김선욱 기자

정진욱 “최근 5년간 적발 위조상품 정품가액 1400억”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동남갑·사진)은 3일 “국내외 유명 브랜드의 로고와 디자인을 도용한 위조상품(짝퉁)의 유통 경로가 오프라인뿐만 아니라 오픈마켓에까지 점차 다변화되고 있다”며 정부의 강력한 단속을 촉구했다.

정 의원은 특허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0~2024년 8월) 특허청 상표특별사법경찰은 1772건의 위조상품 유통을 적발해 1993명은



형사입건하고, 2080명은 검찰에 송치했다. 압수된 물품의 정품가액은 1393억원에 달한다. 온라인 채널에서의 위조상품 적발도 눈에 띈다. 정 의원은 “플랫폼 기업들도 위조상품 유통 경로를 철저히 파악해 온라인상에 범람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김선욱 기자

양부남 “추석 ‘응급실 뺑뺑이’ 전년 대비 40% 늘어”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서구을진)은 3일 “올해 추석 연휴 기간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사례가 지난해보다 40%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전문의 부족을 이유로 재이송된 경우가 절반 가까이 차지했다”고 밝혔다.

양 의원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추석 연휴 기간 119 재이송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9월11일부터



25일까지 2주간 재이송 건수는 총 259건이다. 지난해 추석 연휴 기간(9월26일~10월10일) 재이송 건수(184건)보다 40% 증가한 수치다. 양 의원은 “전문의 부족으로 인한 ‘응급실 뺑뺑이’를 해결할 실효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김선욱 기자



우원식 국회의장, 한덕수 국무총리 접견 우원식(오른쪽) 국회의장이 3일 여의도 국회에서 한덕수 국무총리를 접견하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뉴스

윤 대통령, ‘쌍특검·지역화폐법’ 거부권 행사

국회, 오늘 본회의서 재표결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일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이른바 ‘재상병·김건희 특검’ 및 ‘지역화폐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가운데 국회가 4일 본회의를 열고 재표결을 진행한다.

국회의장실 관계자는 국회가 4일 본회의를 열고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들에 대한 재표결을 진행할 것이라고 3일 밝혔다.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도 본회의의 예상 날짜를 두고 “금요일(4일)에 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 원내대변인은 “한동훈 국민의힘 대

표가 오늘 윤 대통령과 여당 원내지도부 만찬에서 제외됐다”며 “윤 대통령, 김 여사 의혹에 관해 한 대표가 확실한 자기 노선을 구축할 수 있는 시간이 열린 게 아닌가 싶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 한 대표와 대통령 갈등이 눈에 띄고 있는 상황”이라며 “한 대표가 윤 대통령과 의료대란부터 시작해서 김 여사 사과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 아닌가”라고 강조했다.

강 원내대변인은 “한 대표가 대표로서 실력을 발휘해준다면 재표결에서 소위 말하는 특검 찬성표들이 더 나올 것이라고 보고 저희는 그것과 관계없이 저희만의 시간표대로 여론과 민심을 수렴하면서 나

아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통령실은 이날 공지를 통해 “윤 대통령이 3개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고 전했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의 주가 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 ‘지역사랑상품권이 용 활성화법’ 개정안은 지난달 19일 야권의 일방 처리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정부로 이송됐다.

이어 30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해당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상정해 의결했다.

서울=김선욱 기자

“전국 100세 이상 장수마을 1위는 고흥”

톱10에 담양·함평 등 전남 3곳 남인순 “노인복지예산 확대해야”

전국 229개 시·군·구 가운데 인구 10만 명 당 100세 이상 인구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고흥인 것으로 나타났다. 톱 10에 전남에서만 3곳이 포함됐다.

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남인순(서울 송파구 병·사진)이 통계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국내 100세 이상 인구는 2019



년 4874명에서 2023년 7634명으로 56.6% 증가했다. 2023년 기준 남성은 1298명(17%), 여성은 6336명(83%)으로, 100세 이상 여성 인구가 4.8배 이상 많다.

시·군·구 중에서는 고흥이 10만명 당 78명으로 가장 많았고, 그다음으로 경남 합천(71명), 전북 고창(63명), 담양(62명), 경북 영양(59명) 순이다. 6~10

위는 강원 화천(58명), 전북 무주(58명), 경남 의령(56명), 함평(55명), 강원 고성(54명)이 차지했다.

상위 10곳 중 절반이 호남이고, 전남에서만 3곳에 달한다. 반면 가장 적은 곳은 경북 울릉군으로 0명이며, 울산 남구(3명), 부산 강서(4명), 경기 오산(5명), 울산 중구(6명) 등이 뒤를 이었다.

남 의원은 “100세 이상 노인인구가 7000명을 넘어섰고, 65세 이상 노인인구 1000만명 시대에 돌입했다”며 “초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노인복지 예산과 지원이 더욱 확대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오지현 기자